

민주노총 광우병쇠고기저지 비상체계 전환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5.23 18:35

정부고시 발표 전·후 투쟁지침 하달...고시발표 시 인천·경기도 12곳, 부산 1곳 등 총 13곳 운수노조 운송거부투쟁과 민주노총 차원 운송저지투쟁 전개

[사진1]

이명박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3일 산별대표자회의와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계획 등을 확정하고 중앙조직을 비상체계로 전환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강력히 제기하고 고시 강행 시 반 이명박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운송저지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고시 발표 전과 후 투쟁지침을 각각 확정, 고시발표를 앞두고 장관고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정부를 압박하는 방침이다. 만약 고시발표가 강행될 경우 부산,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운수노조 운송거부투쟁과 민주노총 차원 운송저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한다.

정부고시 발표 시 총연맹 및 가맹산하조직 지침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인천·경기도 12곳과 부산 간만부두 냉동 창고 등 13곳 중 각각 담당구역으로 최대한 집결해 운송저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운송저지 집결 시점은 정부 고시 발표 직후이며 가맹산하조직은 비상동원체계로 전환, 완강한 투쟁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저지 투쟁 관련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협상무효화와 정부고시 철회 및 전면재협상 ▲협상책임자 (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공개사과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 중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5월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목동 방송회관)를 개최해 고시철회와 고시강행 시 운송저지 투쟁 경고와 함께 반이명박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한다. 또 24일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에 총력을 기울여 정부를 향한 국민 저항에 힘을 더한다.

민주노총은 이어 25일 오전 11시 청계광장에서 '고시 철회를 위한 민주노총 임원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향의농성에 들어간다. 총연맹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반광우병 투쟁 관련한 현장상황을 종합하는 한편, 네티즌, 시민들과 연대해 현장상황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다.

정부고시 발표 전까지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은 부산, 기흥을 중심으로 운송대응 투쟁에 관한 운수노조 선전전에 결합한다. 경기도 기흥 경우 22일(목) 15시부터 이미 선전전을 시작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